



공사원가용 자재가격 일반 공개

정부시설공사 원가예산에 활용되고 있는 자재 가격이 일반에 공개했다. 지난 주 조달청은 시설공사에 이용되는 자재가격을 조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원가계산에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 이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건설표준품셈 적용단가와 시중거래가격간에 차이가 많으면서도 철근가공조립과 같이 정형화돼 있는 630여개 공종에 대한 실공사비(실거래가격) 자료와 목재 타일 유리 등 건설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일반건설자재 7천 200여개 품목 등 모두 7천 800여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자료공개를 계기로 앞으로 관련업체에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가격조정을 요청하거나 공개대상에 반영되지 않은 자재중 공개를 원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2회씩 정기적인 가격조사를 실시, 그 자료를 공개하고 가격변동폭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조사를 통해 자격자료를 최신화(업데이트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격자료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료실→업무별자료실→시설공사 순으로 클릭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전 5개 발전자회사 2002년 민영화

내년초부터 착수되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개 업체의 민영화작업에 대해 대형건설업체가 인수를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산자부는 이들 한전발전자회사의 민영화에 참가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국내대형 에너지기업들과 건설업체, 해외발전업체들이 발전회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에 LG건설과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한진건설 및 한진중공업, 효성중공업 등이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부건설과 금호건설 삼부토건

등도 참여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어 자회사 인수에 따른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두산중공업과 LG, 삼부, 삼환, 한화건설 등 10여개의 대형 에너지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이들 역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과 에너지업체들이 발전회사 민영화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발전소 운영을 통한 수입은 물론 신규 발전시설공사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산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지난 4월 한전에서 6개 발전자회사를 분리한데 이어 내년 초부터 중부, 남부, 남동, 동서, 서부 등 5개 발전자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KOTRA 서비스 개선 필요

산업자원부가 KOTRA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수준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지원예산의 확충 인력보강, 고객중심의 자세와 인식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문에서는 KOTRA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좋다 10%, 좋다 8%, 보통 6%, 작다 4%, 아주작다 2%로 나타나 만족도가 7.2%에 달했다.

부문별 만족도는 전시박람회 지원 7.9%,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7.1%, 시장개척단 파견 6.7%, 해외출장 지원 6.9%, 해외정보자료제공 6.9%. 사이버 무역지원 6.0% 등으로 전시박람회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이버 무역지원부문등의 서비스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는 26.7%가 예산부족, 23.3%가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시간부족 때문으로 지적됐다.

업무협조가 원활치 못한 요인에서도 27.7%가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시간부족을 꼽았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KOTRA의 업무개선 및 확대를 위해 무역진흥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KOTRA는 상시고객의 수요 및 반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 고객·현장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KOTRA 지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업계, 유관기관, 정부 실무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산업기술 개발자금 관리강화

내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기술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평가관리 체제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기술개발자금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위원회를 산업기술정책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여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원사업별 성과분석을 현행 5년에서 매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한편,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한국기술거래소에 개발기술의 등록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실명제를 도입, 정(情)에 치우친

평가관행을 시정하고 평가위원회를 항시 운영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관련규정을 고쳐, 내년 사업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반기금 1,212억 추가

산업자원부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반기금 1,212억원을 추가로 풀고 기금금리도 0.2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당초 4,079억원 수준이던 산업기반기금은 5,291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금 금리는 현행 6.0%에서 5.75%로 내려갔다.

산업기반기금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산업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쓰이는 설비투자 목적의 대표적 정책자금이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 부품소재산업 육성(92억 원) 고부가가치화(230억원)등 산업구조고도화에

522억원 ▲ 지식기반제조업발전(270억원)등 지식 기반산업발전에 310억원 ▲ 유통합리화 120억원 ▲ 산업단지 입주촉진등 입주지원을 위해 2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기금금리를 한번 더 추가로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자금금리를 0.5% 포인트 인하, 연 2.5%로 조정함에 따라 일반 대출금리도 인하되 여유가 생겨, 정책자금과의 금리 차를 추가로 벌이기 위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조명기기 최저 에너지 효율제 도입

2003년부터 현재 1~5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조명기기 및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가 최저에너지 효율제도로 전환된다.

또 2004년부터는 40W 형광램프 및 안정기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명

기기 및 가전제품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조정안'을 고시 예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지난 4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조정안을 마련한 '전기기기효율관리기술연구회(회장 이선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도 업계 의견을 수렴

해왔다.

정부는 최저에너지효율기준조정안을 통해 40W형광램프의 생산을 금지, 26mm 32W형광램프로의 대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효율 조명기기의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0W 형광램프 보급률이 80%에 달하고

있어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고 제조업체에게 미치는 과장을 감안, 고시는 2004년부터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전기기기 효율관리 기술연구회장은 “전력소비가 많은 조명기기와 가전제품의 고효율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이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 로드맵 구축

산자부는 날로 심화되는 국제표준화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활동의 중장기 계획을 담은 ‘국제 표준화 로드맵’을 구축하고 표준화 기금을 30억원 규모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국제표준화 로드맵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기술위원회에 전략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산자부, 기술표준원 및 각계 전문가등 10여명

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해 올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6억원 규모로 한국 표준협회가 운영해온 국제표준화협력기금을 이번에는 산자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출연, 3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 전기통신 기준단위내역 확정

최근 조달청은 적산일원화를 통한 국가계산 절감 및 설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공사에 적용될 13품목 87개 규격에 대한 기준단위내역서를 최종 확정하고 이 단위내역서는 전국 484개 설계사무소에도 무료로 이메일을 통해 제공된다.

대상품목 및 규격은 올해 3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공사내역서를 분석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120여개 단위내역서를 대상으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가변성이 적은 단위 내역서를 1차적으로 뽑은 다음 관련업계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 등에 기준단위 내역서를 적용할 경우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설계하기가 우선 쉬운데다 공사내역서가 단일화돼 설계도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현장과의 연계성 증대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국가예산 절감효과와 함께 원가계산에 따른 비용 및 행정력 절감과 신속한 업무 추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8월 전기 및 통신분야 기

준단위대가를 공개한 이후 수요기관이나 설계사무소에서 무료 1천 650여회의 설계반영사례가 있을 만큼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계기로 관련협회에서 대상품목 확대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에너지자원 특별 회계의 융자금리 인하

에너지자원 특별회계의 융자금리가 현행 5.25%~6.5%에서 1%정도 낮아져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등에 지원되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의 융자금리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현행 금리보다 1% 정도 낮은 4.25%~5.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는 기준의대출된 자금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자금이용자에게 약 100억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올해 현재 에특회계융자금으로 책정된 1조 613억중 추천 및 집행실적이 추천 5,309억원, 집행 3,748억원 등으로 예년에 비해 저조한 상태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에특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켜 최

근 경기침체에 따라 저조한 에너지설비에 대한 설비투자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시중금리와 에특에 대한 금리 차이가 적어 올해 에특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특회계 융자금은 에너지 공급기반 및 절약시설 투자 확대등을 목적으로 LNG 공급기반 구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등에 5.25%~6.25% 이율에 3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산업기반 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기술개발 융자자금에 대한 융자금리를 0.5%에서 0.75% 인한 6.0~6.75%로 낮춘 바 있다.